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4(월) ~ 2022.2.4(금)

제공일시 2022 02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4(월) ~ 2022.2.4(금)

제공일시 2022 02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ESG 법안에서 'G(지배구조)' 빼고 갈 듯

-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ESG법안에서 G가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SG법안을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이행으로 제한하고,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 연계,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화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할 방침
- EU집행위는 법안명칭을 기존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에서 '지속가능한 기업공급망실사'로 변경하고 23일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기업 300곳 중 EU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실제 대응하는 기업은 21%에 그쳤음

(한국무역신문, 2022. 2. 3) 이용석 기자
<http://www.seoultrade.co.kr/news/view.htm?section=1&category=8&articleNo=78647>

2.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우리는 난국에 처해 있다"

- '유엔 COP27의 모멘텀 구축(Building Momentum to UN COP 27)' 행사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전 세계가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호한 궤도에 올라 있지는 않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음
- 석탄 사용이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과 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다수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

(딜라이트, 2022. 1. 25) 박퍼터슨 기자
<http://www.dl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

3. EU 집행위, 원전·천연가스 '녹색분류' 유지할 듯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원자력·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 규정 초안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회원국과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다수 회원국이 지지하면 EU 차원의 법으로 2023년 발효
- 하지만 전문가 자문단과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2. 1. 27) 김계환 기자
<http://www.yon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

4. 영국 대학퇴직연금, 공해기업 투자금 8조원 회수키로

- 영국 대학퇴직연금(USS)은 최악의 공해기업들의 자산에 투자했던 50억 파운드(8조120억원)를 회수하고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기로 결정. 이번 전환을 '기후 기울기(climate tilt)'라고 표현하며 탄소배출 관련 지분을 30% 낮춤
- 투자 대상 기업 선정에 독일의 솔라엑티브가 개발한 기후전환지수 기준 도입 예정. USS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갈 것 방침

(초이스경제, 2022. 2. 5) 윤지영 기자
<http://www.cho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5>

1. 맥킨지 “2050 탄소중립에 연 3조5000억달러 추가자본 필요”

- 컨설팅 그룹 맥킨지가 25일(현지시간) 에너지전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넷제로 전환은 거대한 경제 변혁’이라 강조
-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조5000억달러(4187조원)의 추가자본 지출이 필요할 전망”이며, “약 1억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약 2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봄

(한스경제, 2022. 1. 26) 박지은 기자
<https://www.hsnews.or.kr/news/View.htm?cid=948879>

2. 블룸에너지, 가축분뇨 활용 청정에너지 생산

- 블룸에너지가 캘리포니아 커먼 소재의 '바 20 낙농장(Bar 20 Dairy Farms)'에서 낙농 폐기물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재생가능한 전력을 생산하고자 1메가와트급 연료전지를 설치
-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전력은 가스 정화 스킴드(gas clean-up skid) 가동을 비롯해 농장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 잉여 전력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로 전달됨

(산업경제신문, 2022. 1. 24) 김신혜 기자
<https://www.kbn.or.kr/news/View.htm?cid=117202767104887>

3. EU, “플라스틱 문제가 기후변화 관건”

-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의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 환경집행 위원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혀 눈길을 받음
- 이번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위원회 설립이 논의될 예정

(에너지경제, 2022. 2. 2) 김현수 기자
<https://www.kbn.or.kr/news/View.htm?cid=117202767104887>

4. 빌 게이츠, 탄소포집 스타트업 ‘버독스’에 965억원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가 미국의 3년차 탄소포집 스타트업 ‘버독스(Verdox)’에 965억원을 투자함
- 버독스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하루 100kg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험설비 3곳을 올해 안에 건설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더나은미래, 2022.2.3) 강명윤 기자
<http://bitnhour.com/archives/61762>

1. 정부, '노동이사제' 국무회의 심의·의결...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심의·의결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기업 36곳,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이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7월 말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함

(디지털타임스, 2022. 1. 25) 임재섭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125019595000844-maeer

-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법안이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

2. 합병 때 기업이 독점 완화방안 마련한다...공정위, 유럽식 심사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유럽연합이나 미국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현재는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공정위가 시장 독점을 낮출 방안을 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동아일보, 2022. 1. 27) 김형민 기자
<http://www.dongg.com/news/article/2022012711447801>

-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시 해당 기업이 영향을 주는 시장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림

-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결합심사에서 시장 영향력을 낮출 시정조치를 내놓았으나 당시 국적항공사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음.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유럽과 미국처럼 **기업이 시정조치 방안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경쟁당국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3. 탄소배출권 진짜 가시권 들어왔다 “전기차 못 만들면 벌금 내야”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는 최대 200~3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외신에서만 들던 탄소배출권 벌금이 국내에서도 실행될 예정

(지피코리아, 2022. 1. 29) 김기홍 기자
<http://www.gpkorea.com/news/article/2022012911447801>

- 실제로 환경부는 전년도 무공해차 보급실적을 토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미달 1대당 60만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대당 150만원, 2029년부터 대당 300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한다고 밝힘

4. 배달앱이 일회용품 부담금 내라...법 개정안 발의

-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의무대상자로 추가하고, 일회용품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법 개정안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은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과 일회용품이 증가했지만 억제 대책이 미흡하다며,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자는 취지를 밝힘

(전자신문, 2022. 1. 25) 권건호, 손지혜 기자
<http://www.enews.naver.com/article/newsapp/20220125019595000844-maeer>

- 사업자에게 과한 부담을 준다는 배달플랫폼 업계의 우려와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존재. 재활용 기술개발, 천연소재 사용 용기 개발 등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

1. MZ세대 잡아라... 팔 걷어붙인 삼성 CEO들

- 성과급 지급이 다가오면서 각 계열사 CEO들이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와 대화를 통해 보상시스템 불만을 풀어나가겠다는 전략**
- 최우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인택트’ 행사에서 성과급제도인 ‘목표달성장려금(OPI)’ 주제를 이야기하며 사내게시판인 ‘세이프플러스’에서 나온 불만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 수치를 설명함. 경계현 반도체부문장도 매주 수요일 실시간 방송과 채팅으로 소통하는 ‘위톡’ 행사에서 OPI를 넘어 추가 성과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답할 예정이며 최윤호 삼성SDI 사장, 한종희 부회장도 소통 방향을 고민 중
- **MZ세대가 전체 직원 수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부는 변화의 바람**으로 보임

(매일경제, 2022. 1. 24) 이승훈 기자
<https://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491017?date=20220124>

2. 임금 세진 ‘임플로이언서’...기업들 임단협 짚짚

- 지난해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MZ세대 중심으로 회사에 공개적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최종안이 부결되면서 쟁의 행위 돌입여부를 검토할 방침. MZ세대 중에 회사 임금, 복지 등을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 전파하는 ‘임플로이언서(employee+influencer)’가 늘어나 기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도 이달 중순 임금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임

(중앙일보, 2022. 1. 26) 백일현 기자
<https://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491017?date=20220126>

3. 또 행동주의 표적된 SK케미칼...”SK바사 지분 팔아라”

-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는 안다자산운용이 SK케미칼에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 SK케미칼은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파트너스로부터 서한을 받은지 1개월만에 또다시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됨
- SK바이오사이언스(SK바사)는 물적분할, 상장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지적하며 장기 성장로드맵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받고 배당확대, SK바사 지분 일부 매각, 신사업투자 등을 제안받음. 작년 9월과 12월, 메트리카파트너스는 SK바사 지분을 50.1%까지 낮추고, SK케미칼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지분이 5% 미만이라 위협요인이 되지는 않음

(한국경제, 2022. 1. 26) 박의명 기자
<https://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491017?date=20220126>

4. 신한은행, GGC와 손잡고 ESG 기업 지원 확대한다

-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GGC(Green Guarantee Company)와 협업해 ESG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
- GGC는 영국 정부와 녹색기후기금 등이 출연한 국제 보증기관으로, 신한은행은 GGC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ESG 관련 자금 지원 ▲이머징 마켓의 그린본드 등의 발굴·운용 ▲ESG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 등 그린파이낸싱을 확대할 방침

(뉴스1, 2022. 2. 3) 민선희 기자
<http://www.news1.kr/article/46728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24(월) ~ 2022.2.4(금)

제공일시 2022 02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U, 그린워싱 잡을 ‘그린클레임’ 규정 공개 임박

- 유럽정책 뉴스매체 유락티브(EURACTIV)는 지난 10년동안 유럽연합(EU)이 개발해온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업이 자사의 활동과 생산 제품,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를 입증하는 ‘그린클레임(Green Claim)’** 규정을 오는 3월 30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2일 (현지시간) 보도
- 그린클레임이란 말 그대로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뜻. 탄소감축 등의 사회적 압박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 정도를 주장하는 기업이 증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LCA(전 생애주기 평가)와 탄소발자국. LCA는 제품과 서비스의 원재료 채취,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 대기와 물에 대한 배출, 생성된 폐기물 양을 평가하는 것. 탄소발자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초점을 맞춰, 기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품의 전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뜻함.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주장하기 위해 LCA 또는 탄소발자국의 검증을 제3자 독립기관으로부터 받아 그에 따른 인증을 공개하고 있음**
- 그러나 EU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457개의 환경 인증이 존재하며, 유럽에만 100개 이상의 환경 라벨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때문에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검증기관마다 사용하는 방법론이 상이해 정말로 친환경적인지 객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잘못된 평가로 LCA 또는 환경발자국 인증이 오용되기 때문
- 이에 따라, 2013년부터 EU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생애주기를 단일의 방법론으로 평가하는 **‘제품환경발자국(PEF)’**을 개발해옴. PEF는 제품 전 생애주기의 환경 영향을 정량화시켜 친환경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임.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독성물질 ▲산성화 ▲담수 영향 등 16개 범주에 대한 환경영향 점수를 과학 기반으로 구축해, 상품의 원재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제품 전과정의 환경 영향도를 점수화시키는 것. 무엇보다 PEF는 ISO14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 기준과 LCA 방법론이 반영되어 국제적 상호 이해도 또한 높음
- EU는 이러한 PEF을 적용한 환경 인증만 유럽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오는 3월 30일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 SPI)’와 함께 공개할 예정**. 즉, 규정에 따라 기업은 PEF 평가를 거친 인증을 받은 경우만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친환경성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동시에 비교 가능해 그린워싱이 억제될 전망
- 하지만 SPI를 적용한 환경 인증 규정 의무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 유락티브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는 대체로 PEF 방법론을 적용한 환경 인증을 환영하고 있지만 몇 가지 약점 또한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일례로 PEF에는 생물다양성 손실 또는 미세플라스틱 누출과 같은 굵직한 환경 이슈에 대한 영향은 다루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과 수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PEF 평가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소규모 기업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지적. PEF 평가 대응을 위해 사내 전문가나 외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감을 클 수 있다는 것

(Euractiv, 2022.2.2) Anna Gumbau
<https://www.euractiv.com/en/economy/news/10-ways-green-claims-in-the-product-environmental-footprint>
(Euractiv, 2022.2.1)
<https://www.euractiv.com/en/economy/news/10-ways-green-claims-in-the-product-environmental-footprint>

- 의무화에 있어 유럽내 논란이 당분간 일겠지만, 유락티브는 SPI를 통한 환경 인증이 유럽에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증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SPI 환경 인증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업계에서 제기